

정부 공정경제 재시동…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

민주당 공정경제 하위법령 당정협의 정보공개 확대 등 주주권 강화 추진 공시 의무화로 부당 내부거래 방지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위해 정보 공개 확대 등 기관투자자 주주권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배당 외 수익'과 내부거래 관련 공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반면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 등으로 지주사 권한은 축소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8개 부처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 당정협의를 실시한 후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회의 후 "이번 협의는 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지침 등 정책 세부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 정책실장.

/연합뉴스

당정은 먼저 주주총회 통지 시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전년도 임원 보수총액 등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조치한다.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장회사 주주총회 운영의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전자투표 활성화와 주주 편의 제고를 위해 본인인증수단을 신용카드와 아이핀 등으로 확대하고 의결권 행사 변경·철회도 허용하도록 했다.

임원 선임 시에는 이사회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임원 후보자 체납사실과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등도 주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거래 공시도 의무화한다. 지주회사와 소속회사(자·손자·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지주회사 내부거래 중에서도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 외 수익으로 계열사 부당지원과 총 수입가 사익편취 우려가 나옴에 따라 회사 간 경영컨설팅(설계)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료 내역을 공시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별도의 공시양식도 마련해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당정 구상이다.

경제적 약자 보호 대책도 마련된다.

유통시장에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가맹점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는 삭제된다.

하도급법 위반 기업의 공공입찰 배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 제한의 기준이 되는 별점제도가 정비돼 별점 경감 사유가 구체화되고 경감폭도 축소된다.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수주·판매)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을 예외적으로 면제한다. 단,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평가제도를 개선해 기존 1차 협력사 외에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정부는 행정입법 과정이 가급적 올해 안에 완료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당에서도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2000선 회복한 코스피 지수 5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1988.53) 대비 16.22포인트(0.82%) 오른 2004.75로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08.2원) 대비 8.0원 내린 1200.2원에 마감했다. /뉴스스

기관 주주활동 쉬워진다… '5%룰' 손질

금융위, 배당목적 투자 등 제외 보고의무 대상 이분법→세분화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할 수 있도록 5% 대량보유 보고제가 완화된다.

보편적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추진이나 대외적 의사표시 등의 주주활동은 5일 이내 보고 대상이던 '경영권 영향 목적' 범위에서 빠진다. 약식 보고 대상도 경영권 영향 유무로 나뉘던 것에서 '경영권 영향목적-일반투자-단순투자'로 세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5% 대량보유 보고 제도(5%룰) 개선과 공적연기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보완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5%룰은 투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하는 규정이다. 상장사 지분집중 정보를 공개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도적으로 주기를 방어해 주식을 사들이는 주식매집 등을 미리 인지해 경영권의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면서 5%룰의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적극적

인 주주활동이 의도치 않게 공시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대형 공적연기금의 지분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공시하면 주총매매에 노출될 수 있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5%를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주주의 기본권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대외적 의사표시 등은 기존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서 제외한다.

다만 특정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정관을 변경하거나, 특정임원의 선·해임을 위한 주주제안등은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 보고 기준과 같은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경영권 유무 등 이분법으로 분류했던 보고의무 대상도 세분화한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적극적 주주활동(임원보수, 배당관련 주주제안)을 하는 투자는 '일반투자'로, 단독 주주권(의결권, 신주인수권)만 행사하는 투자는 '단순투자'로 구분한다.

일반투자는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단순투자는 기준과 같이 최소한의 보고의무가 유지되며 반투자는 10일 이내 약식보고, 공적연기금은 월별 약식보고 해야 한다.

공적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무도 보완한다.

자본시장법상 직원과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는 내부자로 6개월 이내 증권을 매매해 차익을 실현할 경우 법인에 반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만 반환의무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공적연기금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특례를 인정해왔다..

다만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비공개 경영진 면담 등 미공개 정보 접근이 가능한 주주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미공개 중요정보의 취득 이용을 차단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적연기금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고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 장치를 마련하는 경우 단기 매매 차익의 의무 관련 특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5% 대량보유 보고 제도를 오는 10월 중순까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공적연기금의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 보완은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추진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검토'

기재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행안부와 공동으로 연구용역 발주 소비행태·시장동향 따져 조정키로

최대 예산 배정 대비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국민건강·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정으로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과 종교·자선단체·학술법인 등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오염이나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소세를 조정할 계획이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 억제와 외부불경제 교정을 목적으로 과세한다. 이 중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품목에 대한 세율을 높이거나 과세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기재부는 최근 판매량이 늘어난 액상형 전자담배를 개별소비세 인상 대상으

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오는 12월까지 연구 결과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통해 담배시장 동향과 소비행태 등을 따져 담배 과세 근거에 대한 포괄적 검토와 담배 제세 유형, 간접세·부담금 효과 등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담배 과세 조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승용차의 경우 도로 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개별소비세 대상으로 남는다. 다만 경유세는 개별소비세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올해 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에너지원마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유세 인상 필요성을 거론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체계도 바꿀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법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임에도 증여세를 매겼던 현행 세법 체계를 개편해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석대성 기자

스위스 바젤서 이틀간 열려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가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 '국제결제은행(BIS) 정례총재회의' 등

에 참석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총재는 BIS 총재회의 기간 중 ▲아시아지역 협의회 ▲주요 신흥시장국 중앙은행 총재회의 ▲세계경제회의 ▲전체총재회의 등에 참석한다.

여기서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최근의 세계경제, 금융시장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BIS 이사회 일원으로서 'BIS 이사회'와 '경제자문위원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한편 이 총재는 오는 6일 출국해 11일 귀국한다.

/김희주 기자 hj89@

이주열 한은 총재, 'BIS 총재회의' 참석